

SOC 투자 확대 여기서 멈출 것인가



김동주 | 국토연구원 원장

최근 발표한 2016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3% 늘어난 386.7조원에 달한다. 내용을 보면 보건, 복지, 노동, 교육,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예산이 고루 증가하였다. 하지만 유독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의 두 분야에서 각각 6%, 2% 감소한 것이 두드러진다. SOC 투자 예산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이 추세라면 머지않아 SOC 시설 확충은커녕 기존 시설의 유지 관리도 벅찬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아마 SOC 분야는 그동안 충분히 투자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과연 그럴까? 여기서 우리는 국가의 경제 활동과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SOC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도로, 철도 등 SOC의 양적 확대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SOC의 양적·질적 수준이 OECD 국가들에 비하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MF 외환위기 때 잠시 주춤하던 교통혼잡비용은 급증하는 경제 활동과 여가 통행으로 십여 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연간 30조원에 달한다.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 문제도 날로 심화되고 있어, 도로는 물론이고 도시철도, BRT와 같은 대중교통 시스템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SOC의 질적 수준도 우리의 경제력과 소득 수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최근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과 자율 주행도로, 차세대 교통수단을 위한 기반시설 등은 투자 시기를 미루게 되면 향후 지불해야 할 비용이 훨씬 증가할 수 있다. 기존 SOC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 생명을 지키고 국가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SOC 유지 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런 실정인데도 SOC는 가시적인 양적 지표로만 인식돼 투자 예산은 계속 줄고 있다. SOC 확충에 대한 민간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더라도 필요 수준의 재정 투자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한정된 예산 규모 하에서 분야간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을 감안하는 것과 아울러 현행 SOC 재정 투자에 대한 기존의 정책 기초를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SOC 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여서 실질적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질 높은 SOC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을 도모할 수 있는 SOC 분야에 대해 시의적절한 적정 수준의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CERIK